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가도 데즈로·지음 허태아·출판

- I. 동구민주주의 혁명
 - 그 이론적 총괄
- II. 사회주의와 국가의 140년
 - 레닌주의 국가론 비판
- III. 「국가권력의 사회에 의한 재흡수」의 사상
 - 레닌주의 국가론과 사회주의·민주주의
- IV. 영속민주주의 혁명의 이론
 - 프랑스혁명 200주년과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동구 혁명인가 변혁인가!

하늘

하늘



가도 데즈로 (加藤哲郎)

1947년생
1970년 東京대학 법학부 졸업
현재 - 히토즈바시대학 사회학부 교수
정치학·국가론·비교정치 전공

- 著·譯書
- 『국가의 리네상스』 (青木書店)
- 『자파메리카의 시대에』 (花伝社)
- 『사회주의와 조직원리』 (窓社)
- 『전후의식의 변모』 (岩波ブックス)
- 『미래의 일본은 본다』 (共豊, 労働旬報社)
- 『사회위생학으로로부터 혁명까지』 (共豊, 窓社)
- 제출 『자본주의 국가』 (共訳, 御茶の水書房)
- 同 『플란카스틀 읽음』 (共訳, 合同出版) 他

히타유

- 1954년 경남 합천 출생
- 1982년 국민대학 행정학과 졸업
- 1984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치학 연구회 연구생
- 1990년 일본 히토즈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정치학 박사과정수료

論文

- 『홋스의 정치사상 - 종교부분부터의 정치해방』
- 『일본국가 사상 연구』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저: 이·가(加藤哲郎) / 옮긴이·히데유키
피넬리·박영규 / 피넬리·도서출판 하늘방
110-530 서울특별시 중로구 학파동 20-30번지
TEL.: (02) 744-3388 (편집부) 744-4957 (영업부) / FAX: (02) 743-0544
등록년월일: 1989년 12월 22일
등록번호: 제1-975호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일본 저작권자의 정식 판권제하에 의하여
도서출판 하늘방에서 피넬리로 도서출판 하늘방의
동의없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판: 1쇄 · 1991년 4월 15일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값 4,000 원

1990 © Hanullang Press
판권 분사 소유
東歐革命と社会主義
Copyright © Tetsuro Kato 1990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DRT International through Japan UNI Agency, Inc.

Printed in Korea

동구혁명과 사회주의

가토 테츠로 지음
히 데 유키 옮김



본서 「동구혁명과 사회주의」가 일어난 간행 후 반 년도 채 못되어 한국 이로 번역되므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층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필자에게 있어 두가지 기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본서는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쓰여졌다고는 하나, 다루고 있는 문제가 20세기 말 현대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있어 보편적인 것이며, 더욱이 세계사적 측면에서의 영속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자의 사고가, 한국사회 내부에서 'Think globally, Act loc ally!'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국지적으로 행동을)의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비판되며, 필자의 마르크스 이론이 얼마만큼 일본적 편견을 띠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범세계적 문제의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검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이 책은 중국 학생의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 천안문 사태와 동구의 민중들이 공산당 일당독재를 타도한 연쇄적 시민혁명에 촉발되어 집 필한 것입니다.

1980년 6월 4일 일요일, 아시아 중국에서는 '민주의 여신'이 군대의 탄 압에 의해 짓밟혀졌으나, 동 유럽의 폴란드에서는 처음으로 '복수정당제'에 의한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자유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의 반혁명과 동구의 혁명파의 분기가 왜 일어났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본서에 감추어진 동기의 하나입니다. 필자가 생활하는 일본도, 독

자께서 생활하는 한국도 지리적·문화적으로 동아시아에 속합니다. '아시아의 공업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유럽적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구제국의 시민혁명은 현존하는 사회주의 대국인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신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일찍이 '항가리 사건',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 억압과 같은 비르샤바 조약기구를 이용한 간섭, 독재를 단념한 것에 의하여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관계는 소련과 비르샤바 조약기구 기맹국의 경우와 같은 성격의 지배와 종속관계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자본 요청이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의 선택과 시민적 자유의 본연의 모습에 어떠한 제약을 부과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전전(戰前)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식민적 지배나 강제연행의 책임을 애매모호하게 한 채 경제대국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일본국적을 가진 본인으로서의 한국의 민중에 대하여 전쟁 책임과 더불어 전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본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로서는 그 책임의 극히 적은 부분이나마 나누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동하면서도 개성을 갖는 '세계시민', '지구시민'으로서 상호에 뿌리박힌 나쁜 잠정없이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적 세계질서의 구상이야말로 본서에서 무엇보다도 호소하고 싶었던 문제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민주주의자이며 지구시민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자이며 사회주의자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

지 저의 마르크스주의는 소련, 동구에서 국가종교로 되어 있었던 그것과도, 중국이나 북한에 아직까지도 살아 남아있는 그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칼 마르크스와 안토니오 그람시로부터 현대적으로 의의 있는 사상과 이론을 자주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성한 '네오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저의 사회주의도 1917년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에 현존한 이른바 사회주의국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저의 사회주의는 폭력혁명과 연결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민주집권제로 조직된 공산주의 전위당, 절대적 진리라고 이해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그 어느 것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권력의 분배를 지상 목적으로 하여 노동자 계급의 대표를 자칭하는 정당이 국가권력의 전체를 장악하여 생산수단의 전반적 국유화와 명령적 계획경제를 노동자·민중에 강제하는 것과 같은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와는 오히려 대립합니다.

저의 사회주의는 문자 그대로 '사회'중심주의입니다. 즉 국가권력에 응집되어 정치가 권료체에 한정되어온 민중의 민주주의적 공동의 잠재력을 사회 자신에 되돌려 시민사회의 자기통치=자기규율에로 확보해 나가 는 장기의 과정보다 할 수 있습니다.

파리코문 시기에 마르크스가 말했던 '국가권력의 사회에 의한 재흡수'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이며 '시민사회주의'입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그 불가결의 일부입니다만, 그것은 자발적인 공동적·사회적 소유의 여러가지 형태가 지배적인 생산양식 구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경제적 소유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기업경영이나 직장질서에서의 민주주의=노동자 자주관리의 침투를 함의하여 영속 민주주의 혁명의 일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담당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의미에서의 노동자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은 계급으로서의 정치 지배라는 것보다도 민주주의적 정치제도 아래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기통치를 중시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존 자본주의나, 현존 국가의 수용이나, 현존하는 지배에

의 종속, 굴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시민적 저항과 노동시간, 기업공간에의 인권·시민권 확장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저항과 운동 조직의 '무엇보다도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본연의 모습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는 일국의 규모에 있어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며 국부적 규모에서의 여러가지 실천/및 자치의 지구적 규모에의 민중의 연대와 세계적, 중층적 정치공간의 창조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사회주의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로부터의 이탈이다'라고 하는 비판은 일본에서도 이미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毎日新聞」이 본서에 대한 서평(1990年 5月 13日)에서 "본서는 일본에서 나온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구 분석의 서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면 서도 또한 저자는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데, 그 태도는 설득적이지 않다. 넓은 사고의 틀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사회변혁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이 본서를 읽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저 자신이 본서 중에서 말하고 있듯이 본서는 '해답이 없는 문제제기'이며 장래에 개방되어진 이론적 토론을 유발하기 위한 '문제제기'입니다. 단지 일본에서 나온 한가지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답해 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1989년에 동구제국에서 일어난 사태를 '혁명'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비판자들의 의견을 예들들면 동독이 서독에 흡수 합병되어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역사의 발전법칙에 역행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혁명'이나 '시민혁명'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일본의 국내에는 1989년 동구의 사태를 '혁명'이라 할 것인가 '개혁'이라 할 것인가 '반혁명'이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비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잡지 「世界」의 1990년 4월 임시 증간호는 본서와 마찬가지로 '동구혁명'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南塚信吾·宮島直機 編의 講談社 現代新 書에서는 '동구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 깊은 것은 「동구개혁」이라는 책에는 '헝가리의 개혁' '폴란드의 개혁' '동독의 개혁' 등 각국마다의 '개혁'을 분석하면서 루마니아에 대해서만은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유일철이 따랐던 차우세스쿠 독재 붕괴만은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화혁명', '일상생활 속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폭력=혁명' 론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혁명 규정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동구의 변화를 '반혁명' 규정으로 부르고 있는 듯 하나 역시 동구를 논한 연구는 일본에서도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7월에 낸 「사회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재생」이라고 하는 新著로 일본의 독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해 두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은 있을 수 없다'라는지,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사회구성체의 후퇴로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기 때문에 혁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동구민중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평화적 행동의 힘에 의해 타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1989년 폴란드의 원탁회의 자유선거로부터 크리스마스의 차우세스쿠 독재타도에 이르는 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동독·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에서 생생하게 일어난 연쇄적 변화 과정을 ①정치적 권력관계의 단기의 집중적 전환, ② '혁명주의로부터 다원주의'로의 전 사회적 규모로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인 형성원리의 질적 전환을 지표로 이디까지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자제적 혁명', 헝가리나 불가리아의 '위로부터의 혁명', 동독의 '조용한 혁명', 체코슬로바키아의 '우단의 혁명', 루마니아의 '인민혁명' 등 각각의 혁명을 담당한 민중 자신의 호칭이 '혁명'이었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히틀러의 나치스도 '혁명'이라고 칭하여 등장하는데 '강제적 동진화'로 사회 형성원리를 전환시키지 않았던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민주주의 달성을 기준으로 하여 동구의 변혁과 나치스의 '의사혁명'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이른바 '토대·상부구조'론과는 반대로 권위주의 국가나 전체주의에 있어서는 누차 정치적 '상부구조'의 성격이 경제적 '토대'에서 본연의 모습을 규정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귀결은 동서 독일의 통일이나 각종 자유선거의 결과인 사회주의 지향세력의 패배와 시장원리·사적소유의 부활이라고 하는 현 국면의 흐름만은 아직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치혁명이며 사회혁명의 단서였던 1989년 동구혁명의 의미는 오히려 지금부터의 세계사와 세계민중의 움직임으로부터 자리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1989년 동구혁명의 의의를 1789년 프랑스 혁명에 비기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자유·평등·우애'의 시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2백 년 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숫자맞춤에도,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시사했다는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만도 아닙니다. 그 세계사적 심도와 지구적 규모로의 영향력을 문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과 1989년 동구혁명과는 물론 큰 상유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자본주의의 공업적·기술적 발전단계, 그러므로 계급·계층 구조나 인종·민족적 구성이 틀린 것뿐만 아니라 그 지구적 규모에서의 여파도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정보의 확산은 전쟁이나 우편, 철학이나 문학을 매개로 한 파급으로부터

전파와 영상에 의한 동시 체험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그것을 'TV 시대의 연쇄적 혁명'이라고 하는 규정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전화나 TV, 복사기나 컴퓨터가 보급된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트기나 위성방송이 세계를 연결하여 자본도 노동력도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시대의 혁명입니다.

동구혁명론 세계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적 의미를 압도적이며 생생한 형태로 실감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구적 규모에서 시민의 행동을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구민중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열정과 억압에 저항하여 행동한 용기는, 52억의 세계 민중에게 오랫동안 걸쳐서 영향을 부여하겠지요. 이 민중의 움직임이야말로 동서문제로 대체되어 초점이 전 지구·인류적 과제나 남북문제의 앞으로의 해결방법을 방향지어 가겠지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여론 조사결과를 소개하여 한국의 독자 여러분에게 동구혁명의 의미를 문제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1989년 12월에 미국의 하리스사와 일본의 아사히 신문사가 공동으로 행한 '1989년에 동구의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회답입니다.

미국 국민의 48%는 '자신의 손으로 정부를 뽑는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라고 대답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했다'의 30%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회답의 비율은 18~24세의 청년층에서는 한층 높아 56%에 이릅니다.

거기에 대하여 일본국민의 평균적 회답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추구했다' 41%가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 40%를 적은 부분이지만 상회했습니다. 더구나 20~24세의 청년층에서는 '생활수준의 향상' 53%가 '정치적 자유' 39%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일본 국민 특히 청년층이 자기 자신들의 물질주의적 풍족함을 거울로 하여 동구 민중의 움직임을 방관한 끝속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사람들은 물자가 없어 궁핍하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뺨보다도 자유를!'의 에토스에 감동하거나 납득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적 '시민사회'의 취약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청년들은 반대로 미국적 '자유'의 맥락에서 동구민중에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백인이 아닌 한국이나 필리핀의 민주화운동에 같은 반응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까요?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라고 공감할 것인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답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한 공산주의의 포기'나 '민족주의와 종교의 숭리'에서 동구혁명의 의미를 찾아낼 것인가?

본서가 그러한 한국 민중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토론 = 비판의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1990년 8월 15일 동경에서

一橋大學 教授 加藤哲郎